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최은하 의원)

의안 번호	20-189
----------	--------

발의년월일: 2020. 11. .

발의자: 최은하,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김영미, 김진천, 이민석,  
이홍민, 정혜경, 채우진, 한일용

## 1. 제안이유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필수노동자 및 업종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제13조)

3. 조 례 안: 붙임

4. 예산조치: 없음

5.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나. 입법예고: 2020. 11. 19. ~ 2020. 11. 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돌봄, 안전, 물류, 운송 등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포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관련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일자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일자리지원과 이정은(☎ 3153-8693)